2021. 4. 20

'고교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토론회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공동주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일시: 2021. 4. 20. (화) 오후 3시

▌머리말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의 현주소 진단 및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온라인 국회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4월 20일(화) 오후 3시 온라인 생중계**(유튜브 채널: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강득구TV)를 통해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어디까지 왔나?”라는 주제로 고교서열화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그간 학교 교육은 고교서열화로 인해 몸살을 앓았습니다. 서열화 되어있는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중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생까지 과도한 입시경쟁에 내몰려 학습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매월 수백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특권학교에 입학하는 현실은 교육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런 이유로 자사고 일반고 전환에 대한 여론조사는 늘 찬성여론이 반대보다 높았습니다. 때문에 교육부도 2019년 11월에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고교서열화를 해소해 교육생태계를 복원한다는 매우 의미있는 정부 정책의 추진이 순탄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자사고 측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연달아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2019년 11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목고 유형 중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사고와 자공고 규정을 삭제하고 △전국단위 자사고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 규정을 삭제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 자사고・외고・국제고 측은 헌법소원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즉 법적 쟁송이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는 듯한 모양새가 펼쳐진 것입니다.

이에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은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교육 생태계의 복원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심화가 사회적 문제가 된 상황에서 교육불평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고교서열화 해소에 지혜를 모으는 자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1. 4. 20.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인사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만안구 국회의원 강득구 입니다.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어디까지 왔나?〉 를 주제로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하는 토론회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교교육은 고교서열화로 인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서열화되어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우리 아이들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부터 과도한 학습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도 지나치게 많고, 특권학교에 입학하면서 또 다른 문제들을 낳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불평등과 교육격차는 코로나19 이후로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 2019년 11월 교육부는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자사고 측이 제기한 지정취소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연달아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정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획일적인 줄세우기식 경쟁 위주의 교육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교육불평등과 교육격차 해소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구본창 사걱세 정책국장님, 김진훈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님, 이용우 변호사님, 이윤경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고 준비에 수고해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 마음으로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최교진

「고교서열화 해소정책 관련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시며 이번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중세시대 흑사병의 창궐이후 르네상스라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듯이 코로나 19 이후에 우리 사회의 많은 기준이 새로운 기준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사회 경제적 체제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도 코로나 19를 거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의 기준이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과 학교를 바라보는 인식도 전환되고 있습니다.

학교는 이제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삶과 배움을 책임지는 공간으로 학교를 바로보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이 평생 배움의 기반과 삶의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는 장으로 역할해야 한다는 기대와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핵심 키워드는 ‘교육에서의’ 그리고 ‘교육에 의한’ ‘불평등의 해소’ 입니다.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되어 다수 국민에게 상실감과 좌절감을 안겨주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교육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삶을 안전하게 꾸려갈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교서열화를 해소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전환의 첫걸음입니다. 경쟁과 선발 위주의 교육에서 모든 세대의 삶을 지탱하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시발점입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하여 교육격차가 사회계층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의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지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현장의 교사, 교육청 담당자, 교육전문가, 그리고 온라인을 통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만큼 열린 소통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민주적 소통의 노력은 우리 교육을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축사

국가교육회의장 김진경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을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 준비를 위해 애쓰신 강득구 국회의원님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토론회 사회를 맡으신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김태훈 정책부위원장님, 발제를 하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구본창 정책국장님, 그리고 토론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입니다.
정부는 2019년 11월 자사고·외고·국제고를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그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과 이러한 교육청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동(同)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에는 교사, 법률전문가 및 학부모 등 우리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분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고교 서열화를 해소하고 일반고가 고등학교 교육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학생의 적성과 학습능력에 따른 수월성 교육부터 진로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교육까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정책에 대한 현재의 상황을 짚어보고 향후 과제를 제시할 수 있는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목 차

발 제

■ 발제: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1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의 현주소와 후속대책

토 론

■ 제 1 토론: 김진훈(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서울 숭의여고 교사) ····· 19
■ 제 2 토론: 이용우(변호사,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서울시공익변호사단) ····· 25
■ 제 3 토론: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 29

▌발제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의 현주소와 후속대책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Ⅰ. 들어가며
Ⅱ. 교육불평등의 표상이 된 고교서열화
Ⅲ.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추진의 현주소
Ⅳ.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취소 판결의 문제점
Ⅴ. 후속대책
Ⅵ. 나오며

Ⅰ. 들어가며

4·7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결과를 보며 설왕설래가 많지만 분명한 것은 정권을 위한 정치가 아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는 메시지가 표심에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에 대한 민심의 외면이 언제부터였느냐에 대해 여당 내 인사들도 ‘조국 사태’에서 비롯되었다는 메시지에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그렇다면 국민의 민심이 돌아서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 준 국민들이 다가올 거대 정당에 바란 것은 무엇일까? 또 그 즈음에 정부는 국민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생각해 볼 때다. 특히 교육 영역에서 정부는 국민에게 무엇을 약속했는지를 말이다.

‘조국 사태’를 보며 대한민국 국민은 부모의 배경이 교육제도를 통해 자녀에게 대물림

되는 ‘교육 불평등 대물림’ 문제에 분노했다. 사회 기득권층 인사들이 합법은 물론이고 편법과 불법을 써가며 자녀에게 학벌과 소득을 물려주어 불평등이 고착화되는 과정이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세대이다. 경제력 등 부모의 배경에 의해 달라진 교육의 출발선은 ‘노오력의 배신’, ‘능력주의 신화’라는 수식과 함께 청년세대에 좌절과 상실감을 남기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조국 사태’ 직후인 2019년 하반기를 돌아보면 교육제도 내에 존재하는 부모 찬스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을 정부는 제시한 바 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과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이 대표적이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의 경우는 발표 이후 지금까지 제시한 방안이 과연 대입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고교서열해 해소 방안 및 일반고 역량 강화 방안’의 경우는 교육계는 물론이고 국민의 지지도 상당했다. 특목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 고착화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후보들 대부분이 내걸었다. 결과적으로 200개만 살리고 2,000개의 고교는 별볼일 없는 학교로 전락하는 정책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명확했다. 소수의 특권학교가 아닌 모든 학교를 좋은 학교로 만들어야 한다는 시대의 요구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꾸준히 반영되었다.[1] 이런 흐름 속에서 자사고 · 외고 · 국제고를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으로 제시한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는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정책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런데 정책이 발표된지 1년 반이 흐른 지금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자사고 측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 취소 소송에서 연달아 법원이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은 정책 추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진단해야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런 맥락에서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조속히 시행해야 할 대책을 모색해 보려고 한다.

Ⅱ. 교육불평등의 표상이 된 고교서열화

그간 학교 교육은 고교서열화로 인해 몸살을 앓았다. 서열화되어 있는 고교에 입학하기 위해 중학생은 말할 것도 없고 초등학생까지 과도한 입시경쟁에 내몰려 학습노동에 시달려야 했다. 매월 수백만원의 사교육비를 지출할 수 있는 가정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특권학교에

1) 조국사태 직후인 2019년 9월 사교육걱정이 리얼미터에 의뢰한 설문조사에서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의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이 68.0%, 반대가 27.7%로 나타나 찬성 여론이 매우 높았음.

입학하는 현실은 교육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켰다. 교육불평등의 표상, 이것이 고교서열화의 자화상이다.

그렇다면 고교 서열은 무엇에 의해 매겨지는가? 소위 명문대 진학실적에 근거한다. 학벌이 생애 전반에 임금격차를 야기하는 사회[2]에서 명문대 진학 확률에 따라 고교 서열이 매겨져 있으며 명문대 진학의 기회가 좀 더 넓은 구멍을 제공하는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벌어지는 것이다. 대학알리미의 공시 정보를 통해 2020학년도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비율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영재학교와 일반고의 격차는 무려 113배였다. 과학고가 22배, 외고/국제고는 15배, 자율고는 5배로 일반고보다 합격자 비율이 높았다. 자율고의 경우 전국단위와 광역단위 자율형사립고와 자율형공립고를 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들 학교유형 중 서열의 윗단에 있는 전국단위 자사고와 일반고의 격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유형별 서울대 입학 비율 차이

구분	2019학년도 고3 학생수	2020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수(명)	학생수 대비 합격자 비율(%)
일반고	497,081	1,698	0.34
영재학교	732	282	38.52
과학고	1,651	123	7.45
외고/국제고	6,917	345	4.99
자율고	39,454	664	1.68

*각 고교유형별 2019년 3학년 학생 수에서 각 고교유형별 2020학년도 서울대 합격자 수를 나눈 수치임
**과학고의 경우 2학년 조기졸업 제도가 있으므로 2학년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함

1.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

문제는 이같은 고교서열을 점유하는 과정, 아니 출발선에 부모 찬스가 작용한다는 점이다.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부모의 경제력이다. 사립외고, 국제고, 자사고의 한 해 학비는 평균 1,000만원 정도이고 한 해 학비가 3천만원에 육박하는 자사고도 존재한다.

2) 「대학서열과 생애 임금격차」, 이지영·고영선, 한국노동연구원, 2019.

<특권 트랙 초·중·고 학비 분석>

(한 해 기준, 단위: 만원)

	사립초	조기유학	사립국제중	사립외고	국제고	자사고
최고액	1,295		1,499	1,866	(사) 1,812	2,672
평 균	882	(초) 4,737 (중) 4,370 (고) 5,902	1,104	1,154	1,032	886

* 여영국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

** 천원 단위에서 반올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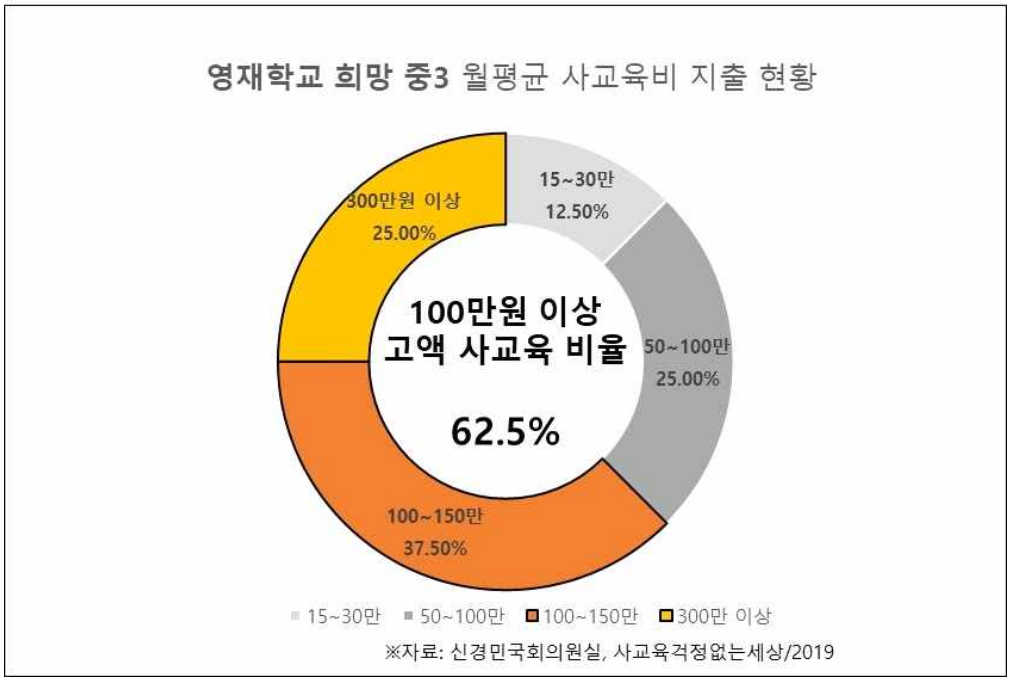
이들 학교는 무혈입성하는 곳이 아니다. 입학대비와 입학 이후에도 상위권 학생들과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선행학습형 사교육비 지출이 만만치 않다. 2020년 상반기에 신경민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이 실시한 '희망고교 유형에 따른 사교육 실태 조사'에 의하면 자사고를 희망하는 중학교 3학년의 경우 10명 중 7명이 월 100만원 이상의 고액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일반고를 희망하는 학생의 월 1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비율이 14.8%인데 자사고의 경우 69%로 4.7배 차이가 난다.

<중3 월평균 100만원 이상 고액 사교육비 지출 현황>

(질문) 학원, 온라인 강좌(EBS 제외), 과외, 학습지 등 포함하여 사교육비로 대략 한 달에 얼마를 지출합니까? (예체능 및 컴퓨터, 학교 방과후 교육비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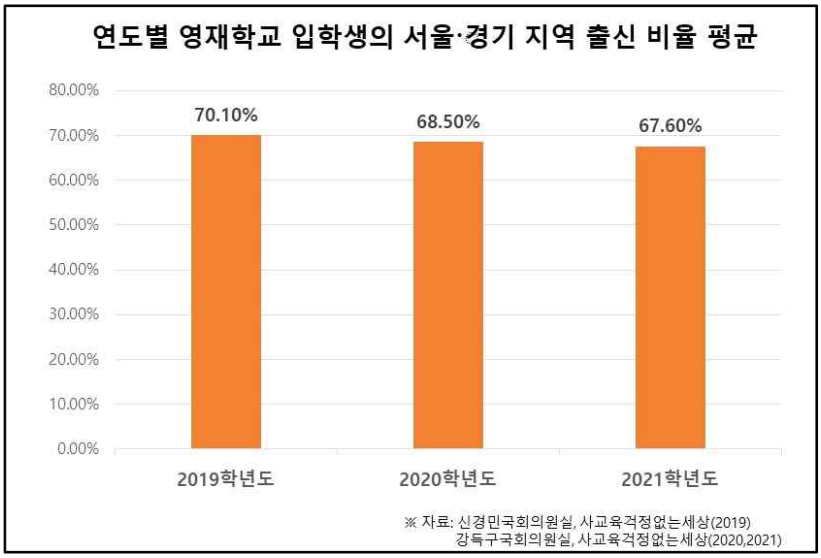
[자료] 신경민국회의원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재학교를 희망하는 중3 학생의 경우 62.5%가 월 100만원 이상의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4명 중 1명이 월 300만원 이상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거주지역에 따른 교육불평등

거주지역에 따른 불평등도 심각한 문제이다. 전국 8개 영재학교의 출신 중학교를 분석한 결과 10명 중 7명이 서울・경기지역이었다.



영재학교 입학생 출신 중학교의 시·구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상위 10개 지역 출신 입학생 수는 358명으로 전체 828명 중 43.2%에 해당하는 인원이었다. 이 상위 10개 지역은 모두 사교육 밀집 지역으로, 서울의 경우 '강남구(25.5%), 양천구(12.8%), 서초구(9.0%), 송파구(8.4%), 노원구(5.3%)' 이 다섯 개 구가 서울 출신 입학생의 61.1%를 차지했다. 경기 지역의 경우 '고양시(19%), 성남시(18%), 용인시(12%), 수원시(10%), 안양시(8%)'로 경기 출신의 66.9%가 이 5개 지역 출신이었다. 사교육과열지구 쏠림현상은 외고에서도 확인되었다. 2019학년도 한영외고 신입생의 83%(182명), 대원외고 입학생의 52%(126명)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 출신이었다.[3)]

전국단위 자사고의 서울·경기지역 쏠림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다. 2020학년도 외대부고 신입생 10명 중 9명, 민사고는 10명 중 8명이 서울과 경기지역 출신이었다. 특히 민사고의 경우 학교가 위치한 강원지역의 신입생은 단 5명에 불과했다.[4)] 지역 인재 선발이라든지 사회통합이라는 교육적 책무성이 배제된 채 부모의 배경에 의한 교육불평등의 표상이 된 고교서열화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3) 「고교 유형별 입학생의 출신 중학교 소재지 및 사회통합전형 운영 실태 분석」,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보도자료, 2019.
4) 위의 보도자료.

Ⅲ.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추진의 현주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간 교육불평등의 표상이 된 고교유형에 따른 수직적 고교서열화의 문제가 2019년 하반기 국민 여론의 공정성 요구와 만나면서 2025년까지 외고ㆍ국제고ㆍ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고 영재학교와 과학고의 입시를 개선한다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으로 귀결되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선포된 고교서열화 해소가 국정과제로 반영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단계적 전환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면서 정부가 이 문제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인상을 보이다가 태세를 급전환했기 때문이다. 물론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 발표 이전에도 선발시기 일원화 등 추진된 정책이 있었지만 본 고에서는 2019년 이후에 집중해 정책 추진의 현주소를 짚어 보려고 한다.

1. 교육부의 정책 추진 경과

교육부의 정책 추진 경과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수직적 고교체제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된 시기부터 교육부가 취한 정책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2013년 심각한 입시부정을 감사하고서도 자사고 봐주기로 일관한 박근혜 정부와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교육부 정책이 어떤 차이를 보였는지도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2013년부터 현재까지 교육부의 정책 추진 경과를 살펴보려고 한다.

① 교육부의 국제고 · 외고 · 자사고 등의 입시부정에 대한 감사(2013년)

삼성 이재용 아들의 영훈국제중 입학과정에서 성적 조작 등, 영훈·대원 국제중의 입시비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국회의 관련 조사 및 감사가 진행되면서 2013년 6월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외고·국제고·자사고·자율학교 등 91개교의 입시부정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함.

10월 23일 교육부가 발표한 감사결과에 의하면 자사고 21개교, 외고 19개교, 국제고 7개교, 자율학교 2개교에서 총 94건의 입시 부정이 적발됨. 입학전형 관련 주요 적발 내용은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미봉인하거나, 심사자가 지원자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상황에서 평가 실시 ▲자기개발계획서 기재 배제사항을 기재한 지원자에 대한 미 감점처리 ▲입학전형위원회 심의 없이 면접 문항, 면접표, 심사점수 부여방법 등 임의 수정ㆍ변경 ▲입학전형

실무 담당자를 면접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원자 정보 노출 ▲사교육 영향평가 매뉴얼 미준수 등이었음. 즉 다수의 외고・국제고・자사고・자율학교가 주어진 선발권을 공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한 것임. 또한 점검 및 감사 결과를 5년 단위 운영 성과 평가에 반영 및 위반 정도에 따라 지정취소 사유로 활용하도록 하며, 반복적 위반사례 발생시 학교장 징계 등 엄정조치할 계획을 밝힘.

② 교육부의 ‘자사고 봐주기’(2014년)

□ 2014년 3월 자사고 재지정평가를 앞두고 당시 문용린 교육감은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자사고도 학교 스스로 강하게 존속을 원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자사고 봐주기’를 공언함. 실제로 문용린 교육감 재임시 자사고 운영평가 지표는 “문턱 낮은 ‘무사통과 지표’”[5]라는 수식을 얻기도 함.

□ 2014년 10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결정에 대해 그해 11월 교육부는 직권취소 명령을 내림. 이에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교육부의 직권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대법원에 소송을 냄. 결론은 4년 뒤인 2018년에 났으며 대법원이 교육부의 손을 들어줌. 2013년 대대적인 입시부정이 발견된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치명적인 문제를 눈감는 암흑기의 시작을 알리는 계기가 됨.

□ 2014년 11월 21일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과 11월 2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연달아 발표하면서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및 자사고의 불법적 학교 운영 형태를 눈감아 주는 일련의 정책들을 쏟아냄. 본격적인 ‘자사고 봐주기’에 다름아님.

「외국어고, 국제고, 국제중 운영평가지표 및 평가계획(안)」은 △적발될 경우 지정취소가 바로 가능한 ‘부정입학’이 평가내용에서 빠졌고, △외국어고・국제고 학생들의 ‘이과진학’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높은 기본점수로 인해 대부분의 학교가 기준 점수 이상을 받게 되는 등 노골적으로 봐주기 위한 평가로 흐를 가능성을 열어주었음.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에서는 외국어고・국제고・국제중 및 자사고의 지정취소 사유를 엄격히 하여 지정기간 중 취소를 사실상 어렵게 하려는 의도를 담았음. 즉 각종 비리가 적발될 경우에도 이를 눈감아 주겠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임.

5) 「[단독]문용린 교육감 때 자사고 1차 평가 문턱 낮은 ‘무사통과 지표’ 드러나」, 경향신문, 2014.8.4.

③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의 선발시기 일원화 등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에 시동을 켬.

□ 2017년 8월 30일, 교육부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고교체제 개선 방안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8년(2019학년도 고입전형)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신입생 우선선발권을 폐지하여 일반고와 입시를 동시에 실시하겠다고 보고함.

□ 2017년 11월 2일 교육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고입동시실시 추진 방안'을 발표함.

□ 2017년 12월 27일 학교 간에 공정한 입학전형이 이루어지고 소수 특정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하고 자사고를 지원하는 학생에게는 일반고에 대한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 2018년 2월 28일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 학생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출

□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의 고입 동시 선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헌이라고 일부 자사고 측이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고입 동시 선발을 '합헌'이라고 결정함. 그러나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는 '위헌'을 선고함.

④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 발표

□ 2019-7-26 전북・경기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 발표

- 상산고 지정취소 부동의, 군산중앙고・안산동산고 동의하기로 결정

□ 2019-8-5 서울・부산교육청,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신청 검토 결과 발표

- 서울 8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부산 1개교(해운대고) 교육청의 지정취소 결정 교육부 동의

⑤ 자사고・외고・국제고 일반고 전환 발표와 법령 개정

□ 2019-11-7 고교서열화 해소 및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 발표

- 외고・국제고・자사고를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2025년까지 일반고로 전환
- 영재학교・과학고 입시 개선
-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으로 고교학점제의 내실있는 추진

□ 2019-11-27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특목고 유형 중 외국어고와 국제고 삭제, 자사고와 자공고 규정 삭제, 전국단위 자사고의

전국단위 모집 특례 삭제

□ 2020-2-2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2020-8-10 서울시교육청의 휘문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 서울시교육청은 7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50억원 이상의 회계비리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를 받은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취소를 결정했고 교육부는 8월 10일 이를 동의함.

□ 2020-12-10 특목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취소) 시 필요한 절차를 “교육부장관과의 협의”에서 “교육부장관의 동의”로 변경
-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기간 연장 규정 삭제

⑥ 영재학교 입시 개선

□ 2020-11-17 영재학교 · 과학고 입학전형 개선방안 발표

- 개선사항: △영재학교간 중복지원 금지, △영재학교·과학고 전형기간 축소, △영재학교 지역인재 우선선발 확대, △영재학교 입학담당관 배치 등
-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 △지필고사 존치, △일반고보다 우선 선발하는 특권 부여,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으로 대비할 수 없는 새로운 평가 요소 등

□ 2021-2-23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영재학교 · 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영재학교 입학전형에서 중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임.
- 지필고사 폐지가 답임. 개정안 자체에도 보완책이 필요함. 선행학습 영향평가의 책무를 학교장이 아닌 외부 전문인력이 참여한 심의기구여야 함.

교육부의 정책 추진 경과만 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무리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가 방향을 결정하면서 수요자인 학부모의 선택도 이에 따르는 모양새이다. 언론을 통해 발표된 자사고와 외고의 경쟁률이 잇달아 하락한 것[6]은 수요자의 선택이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된다.

6) 2021학년도 외고 경쟁률은 1.04 대 1, 자사고는 1.48 대1로 하락했다. 전국 30개 외고 중 12개교에서 미달사태가 낳고, 전국단위자사고 중에서는 광양제철고, 김천고, 북일고 3곳이 미달되었다. 「외고 · 자사고 ‘아 옛날이여~’... 신입생 모집 정원 미달 속출」, 세계일보, 2021.1.3.

2. 이해관계자의 대응 과정

정부의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에 이해당사자들은 법적쟁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와 관련해서는 행정소송,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학교 지위 조항을 삭제하는 것에는 헌법소원으로 대응하고 있다.

①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자사고 측의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앞서 살핀 것처럼 2019년에 실시된 자사고 재지정평가 결과에 대한 행정소송이 이어졌다. 2019년 8월, 부산 해운대고, 안산동산고, 서울 8개 자사고(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 대부고)가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해 행정소송 국면으로 치닫게 되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50억 횡령으로 대법원의 실형을 받은 사학비리의 온상인 휘문고에 대한 서울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해서도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행정소송의 과정을 밟고 있다.

2020년 12월 18일 첫 번째로 부산 해운대고의 행정 소송 1심 결과가 나왔다. 법원은 해운대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어 서울의 경우도 법원이 배재고 · 세화고(2.18. 1심 선고), 숭문고 · 신일고(3.23. 1심 선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교육청이 수세에 몰린 상황이다.

② 외고 · 국제고 · 자사고의 헌법소원

2020년 1월 6일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2019년 11월 26일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들은 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펼쳤으며 2020년 5월 27일 강원외고 등 16개 외고 법인과 교원 · 학부모 등은 헌법재판소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7)]

수도권 자사고와 국제고 25개교도 5월 28일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법소원에는 서울 자사고 21개교, 전국단위 자사고인 인천하늘고와 외대부고, 안산동산고, 청심국제고가 참여한 것으로 밝혀졌다.[8)] 이 외에 민사고, 상산고, 현대청운고 등도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헌법 소원을 제출한 상황이다.

3) 교육당국과 사학 간의 법적쟁송 과정의 우려 사항

이처럼 교육당국과 일반고 전환 대상인 사학 간의 법적 쟁송 과정에서 가장 우려가 되는

7) 「"일반고 강제전환은 헌법 위반" 16개 사립외고 헌법소원 냈다」, 중앙일보, 2020.6.1.
8) 「수도권 자사고·국제고 25개교 헌법소원…"자사고 폐지 반대"」, 뉴시스, 2020.5.28

점은 국민 여론이 법원의 판결에 호도되는 상황이다. 분명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에는 이에 찬성하는 다수 국민 여론이 반영되어 있다.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는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판결을 부각시켜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이 아무 문제없는 혹은 국민으로부터 선호받는 학교에 대한 탄압의 일환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사고 재지정평가와 관련된 행정소송은 교육청이 지더라도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지위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삭제해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반기를 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한다. 다시말해 자사고 재지정평가의 경우 평가지표 및 합격점수의 변경에 대한 재량권이 교육감에게 있지만 이를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 자사고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법원이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수긍이 가지만 고교 서열화 해소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교육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거부하기 어렵다고 보는 낙관론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언론의 호도와 이해관계자의 결집이 교육적 정당성을 지닌 정책 추진에 제동장치가 되는 상황에 대해 낙관론으로 일관할 수 만은 없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 자사고 측의 지정취소 취소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결의 문제점을 따져보고 향후 보완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Ⅳ.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취소 판결의 문제점

자사고측이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법리적으로나 공익적으로나 문제점이 발견된다.

1. 납득할 수 없는 법원의 판단

먼저 자사고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원이 내린 판단을 보면 재지정평가 기준 점수를 60점에서 70점으로 상향한 것과 평가지표의 신설 및 변경 사항 등에 대해 자사고 측이 예측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는 위법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① 기준 점수의 70점 상향

2014년 기준 점수는 시도별로 다양하게 운영하여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70점이었으며, '봐주기식 평가' 라는 비판이 제기된 이후 2018년 충남 삼성고 평가에서부터는 다시 지정취소 기준 점수 70점으로 회복되었다. 즉 자사고로서는 기준 점수가 고정불변의 기준이 아니라 사립학교의 책무성이나 운영의 투명성이 강조될 경우 변동 가능한 점수였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를 설립 · 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 제10조, 제31조 제1항, 제4항에서 도출되는 기본권임을 확인하는 한편, 학교 교육이 개인 · 사회 · 국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사립학교도 국 · 공립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다" 는 점을 밝히고 있다.(헌재 2001. 1. 18. 99헌바63, 판례집 13-1, 60, 68 참조). 즉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기본권이기는 하나 사립학교는 공공적 특성이 강한 공교육기관으로 공공성이 강조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교육기관으로서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은 매우 합리적인 것으로 70점의 기준 점수 상향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② 감사 지적 사례 등의 감점 상향

법원은 감사 등 지적 사례로 인한 최대 감점을 2014년 3점에서 12점으로 9점을 확대한 것이 재량의 일탈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도 감사 등 지적 사례 항목은 시도 교육청별로 평가 배점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다. 실례로 서울시는 2014년에 최대 5점 감점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즉 감사 등 지적 사례 감점 비율도 달라질 수 있고 교육청마다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사고로서도 충분히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자사고가 갖는 공교육기관으로서의 공공성을 고려해볼 때 감사 지적사항을 자사고 재지정 평가의 주요요소로 삼는 것은 당연하다. 감사 및 지적 사례는 규정이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들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즉 자사고측 입장에서 볼 때 감점의 폭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감사 등 지적 사례에 해당하는 감점을 자사고의 유불리로 따질 수 없는 항목이다.

③ 법인전입금 항목 및 세계잉여금 항목의 강화

다음으로 법인전입금 전출 계획 이행 여부와 교비 회계 운영의 적정성 항목이다. 법원은 한 해라도 1% 미만인 경우, 0점 처리하는 기준을 신설하거나 최고 등급을 받은 잉여금 항목

을 갑작스럽게 최저 등급을 받을 정도로 변경한 것은 원고가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평가기준 강화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도 밝혔듯이 ‘학교법인이 교직원, 인건비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 것을 기반으로 하는 자사고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인전입금 관련 항목을 강화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자사고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은 학생으로부터 받은 수업료 등의 총액의 5%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전입금 규정의 1/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하는 2019년 평가 기준이 과연 비합리적이고 위법한 기준일지 의문이다. 오히려 해운대고의 경우 2015~2016년 법인전입금을 2년간 아예 미납하는 등 법인전입금 충족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부실한 운영 행태를 보여왔다. 해운대고 측은 미납분을 한 번에 전출했기 때문에 가혹한 평가라고 하지만 사실 회계는 보통 1년 단위로 결산이 되는 것이지 평가기간인 4년 단위로 결산되는 것이 아니기에 1년 단위로 구분하여 법인전입금 전출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매우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라고 봐야한다.

세계잉여금 항목도 마찬가지이다. 자사고는 학생으로부터 받은 교육비를 바탕으로 운영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적절하게 회계가 운영되어야 하며 그와 같은 맥락에서 세계잉여금 비율을 엄격하게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다.

2. ‘자사고 봐주기’를 벗어난 공정한 평가가 위법한가

자사고는 입시 중심의 명문고를 육성하기 위한 목적의 사립학교가 아니다. 애초 자사고는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할 것을 목적으로 일반고보다 폭넓은 자율권을 부여받아 설립된 특수한 학교 유형이다. 그런데 이 목적이 왜곡되어 대입에 유리한 학교 교육과정으로 그 특색이 변질되고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지 못했다면 자사고 재지정 취소는 온당한 결정이라고 보아야 한다. 2014년 3월 30일 당시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자사고 첫 재지정평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평가에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은 자사고도 학교 스스로 강하게 존속을 원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해 충격을 주었다. 지난 평가 이후 자사고 재지정평가 기준 강화를 요구하는 사회적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었고, 이번 지표 강화는 이 문제를 보완하고 평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부분이었다.

3. 시대정신이 반영된 공익적 판단의 결여

학교 교육 다양성을 명분으로 지정받은 자사고에서 실제 우리가 기대하는 교육의 다양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정진후 전 국회의원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심지어 전체 수업의 최대 66.9%를 국영수로 편성해 수업의 2/3를 국영수로만 채운 자사고도 있었다. 설립 취지라던 교육과정의 다양성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결과였다. 입시에 종속되지 않고 학생들이 다양한 재능을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성을 주었는데 그동안 자사고의 교육은 입시 사관학교라는 오명만 남겼다.

왜 자사고가 5년 단위로 계속해서 재지정 평가가 필요한 한시적인 학교 유형인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자사고 등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이미 끝났다고 본다. 그동안 자사고는 주어진 자율권으로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차별화하기보다는, 사실상 입시 위주의 교육을 강화하여 새로운 명문 입시 사관학교가 되었다. 학생 선발권이라는 엄청난 특권으로 성적 우수학생을 선발하고 대입에서 선발집단으로 인한 효과를 누리며 소위 명문의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민들 10명 중 7명은 고교서열화가 해소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리얼미터 조사결과 2019. 10. 7.).

즉 자사고측의 손을 들어준 잇따른 법원의 판결은 중학교 교육의 정상화, 고교서열화 해소, 과도한 사교육비 및 경쟁 완화, 교육 양극화의 해소, 모든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과정의 제공이라는 국민적 열망을 무시한 처사인 것이다.

Ⅴ. 후속 대책

1.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철저한 대비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의 경과에서 살핀 것처럼 자사고 지정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중이며 헌법소원이 제출된 상황이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언론 지형이 기울어지고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의 인식 변화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한 바 있다.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육당국의 법적 쟁송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해운대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의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지만 2심과 3심이 남아있고 아직 1심 판결이 끝나지 않은 학교들이 있다. 그간 재판부의 판결에 반박을 가할 요소

들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예컨대 기준 점수 상향에 대해 자사고 측이 예측하기 힘들었다고 하지만 이미 예고한 정황들이 교육청의 홈페이지 게시물이나 회의자료를 통해 남아 있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외고, 국제고, 지역단위 자사고와 전국단위 자사고 등의 사학에서 그간 제기해 온 주장에 맞설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쟁송의 과정을 대비해야 한다.

2.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따른 법률 개정

자사고 제도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고등학교 제도, 종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직접 법률로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 교육제도 법정주의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비록 헌법 제31조 제6항 소정의 교육제도 법정주의는 교육제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까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으로 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입법자가 정한 기본방침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집행하기 위한 세부시행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이 가능하다(헌재 1991. 2. 11. 90헌가27).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등학교 제도, 종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가와 사회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매우 크고, 입학전형제도는 학생 및 학부모, 학교, 교육당국 등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 있는바, 이러한 제도의 설계는 법률로써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일부의견)”

따라서 교육불평등의 표상이 된 고교서열화로 더 이상 몸살을 앓지 않도록 초중등교육법과 영재교육진흥법을 개정해 수직적 고교유형이 발생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

3. 일반고 역량 강화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 이후 가장 대두되는 것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현재로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으로 교육부가 제시한 고교학점제의 내실 있는 운영이다. 교육부는 지난 2월 17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 발표 이후 고교학점제가 상당히 진전을 이루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여전히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는 모양새이다. 또한 내년에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발표도 예고되어 있다. 고교학점제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서는 그간 고교교육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된 수업과 평가의 개혁을 통한 국민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새로운 교육과정이 담보해야 한다. 여기에 교육과정에 부합하는 대입제도의 마련도 시급하다.

4. 서열의 정점에 위치한 영재학교 문제 해결

개선 방안이 나왔지만 고교 서열의 정점에 위치한 영재학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수도권 및 사교육 과열지구 쏠림현상, 졸업 후 의대진학으로 이어지는 왜곡된 영재교육을 정상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강득구 국회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에 대한 답으로 단기적 방안과 중장기적 과제를 내놓았지만 교육부의 개선방안은 단기적이었며 그것도 미흡했다.

재차 언급하자면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국단위 지원이나 이중지원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영재학교 입학생의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지역 영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단순 지식을 평가하는 선다형·단답형 위주의 지필고사를 폐지해 사교육을 통해 만들어진 영재의 선발을 멈춰야 한다.

영재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으로는 세 가지가 필수이다. 첫째, 시도교육청 산하에 영재발굴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영재교육 전문가를 위촉하여 줄세우기 방식이 아닌 영재의 잠재력을 바탕으로 선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재학교가 생략한 고교 교육과정을 필수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영재학교는 초중등교육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대부분 영재교육진흥법에 의해 운영되므로 국가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벗어나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전국 8개 영재학교는 경쟁적으로 대학의 전공 학과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편성하려고 고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초압축적으로 운영하면서 영재학교 입학을 원하는 초·중학생에게 과도한 선행학습을 요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는 물론이고 고교와 대학 교육과정을 선행하고 영재학교에 입학해서도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사교육을 하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영재학교는 분리교육 기관이 아닌 시도교육청이 발굴한 영재를 위탁받아 교육하는 체제로 전환해 고고서열의 문제와 분리교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Ⅵ. 나오며

2019년 11월 고교서열화 해소 방안이 발표되는 시점만 하더라도 정책 목표가 달성될 것 같은 장밋빛 환상이 펼쳐졌다. 1년여가 지난 현재에는 법적쟁송에 의해 가시밭길이 되었다. 코로나19로 부모의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현실을 몸소 체감하는 시점에서 교육불평등의 표상이 된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이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 된다. 더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해 교육 정책에 제동이 걸리는 인상을 주는 것도 막아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교육당국과 시민사회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당부를 드리며 발제를 마무리한다.

제1토론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대적 요청입니다.

김진훈(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서울 숭의여고 교사)

1. 들어가며

발제를 통해 고교서열화의 폐해와 교육부의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지금은 국민적 기대에 따라 고교서열화의 중심인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잇달아 취소판결을 내리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발제자가 지적한 대로 법원 판결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공익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법원의 자사고 지정취소 취소판결의 근거가 되는 '평가 기준의 강화'와 '사전에 알리지 않은 것'은 일방적으로 자사고의 입장을 따른 것이다. 발제자의 논거대로 평가 기준을 강화한 것은 상식적이고 합리적 수준에서 이루어졌으며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향후 법정에서 일방적인 자사고의 입장에서 벗어나 균형 있는 시각으로 본 사안이 다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덧붙이고자 한다.

2. 분리 교육의 폐해

한국 사회는 점점 사회적 갈등의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 세대 간, 계층 간, 성별, 지역별 갈등이 심화되면서 극단적인 투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갈등의 요인이 다양하겠지만, 다른 집단을 공감하며 소통하려는 노력이 부족해서 빚어지는 경우가 많다.

어린 시절부터 계층별로, 지역별로 분리된 채 서로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경험이 부족하기만 하다. 소위 엘리트 코스라고 불리는 사립유치원, 사립초등학교, 국제중, 자사고, 명문대학으로 이어지는 이들에게 대중과 공감하는 경험은 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특권의식

에 사로잡히거나, 서민과 함께 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 택배 노동자의 고통에 무감각한 채 먼 길을 돌아서 배송하게 하거나 부유한 동네에 임대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도 한다. 끼리끼리만 어울리게 하는 것은 사회 전체적으로 위험을 가중한다. 집단 간 갈등이 심화하고, 외부의 변화를 수용하기 어렵게 한다. 생태 다양성이 있는 공간에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생산되고, 상호 협력적인 관계를 만들 수 있다. 기성세대의 왜곡된 계층, 지역, 성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라도 교육이 통합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그 시작은 어린 시절부터 지역적, 계층적으로 함께 공부하며 연대 의식을 쌓아갈 때 가능해진다. 일반고에서 학업 수준과 계층이 다양한 학생들이 모여 서로를 알아가야 한다.

자사고를 그대로 두고 이제까지의 문제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문제가 더 가속화된다. 자사고에서 비슷한 소득과 특권을 가진 집단이 만들어지고, 그렇지 못한 일반고 아이들의 소외감. 나아가 대입에서, 취업에서 벌어지는 격차를 이제는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3. 교육과정의 자율권은 고교학점제로 일반고에서도 가능

자사고가 시작될 때 내세웠던 교육과정의 자율화는 현재의 고교학점제가 정착되면서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다.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는 모두 2015 개정 교육과정 상의 필수 이수 단위 94단위로 같다.

< 2015 개정 교육과정 단위배당기준 : 일반 고등학교(자율 고등학교 포함)와 특수 목적 고등학교>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 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국어/한문/교양		16	
소계			94	86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일반고와 자사고의 교육과정 상의 차이는 자율 편성 단위 86단위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최근 일반고에서도 진로 선택 과목과 전문과목을 대거 도입하며 오히려 일반고에서 자율고보다 더 많은 선택 과목이 개설되기도 한다.

학교	지정 과목	선택 과목	
세화여고 (자사고) 서초구 1,063명	19	**45**	일본어I, 프랑스어I, 중국어I, 확률과 통계, 기하, 실용수학, 화법과 작문, 영어독해와 작문, 언어와 매체, 진로영어, 세계지리, 동아시아사,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고전과 윤리, 국제경제, 현대세계의 변화,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일본어II, 프랑스어II, 중국어II, 프로그래밍, 심화국어, 실용국어, 경제수학, 미적분, 심화영어I, 심화영어독해I, 심화영어작문I, 한국지리, 세계사, 사회문화, 생활
은광여고 (사립고) 강남구 743명	13	**69**	문학, 고전읽기, 수학Ⅰ, 수학Ⅱ, 심화수학Ⅰ, 영어Ⅰ, 실용영어,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수학Ⅱ, 미적분, 기하, 심화수학Ⅱ, 영어Ⅱ, 영미문학읽기, 경제, 정치와 법, 한국사회의 이해, 세계지리, 여행지리, 윤리와 사상, 고전과 윤리, 세계사, 물리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화학실험,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과학사,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감상과 비평,

			일본어Ⅰ, 중국어Ⅰ, 일본어Ⅱ, 중국어Ⅱ, 실용경제, 환경, 독서, 고급수학Ⅰ, 심화영어Ⅰ, 사회문화,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동아시아사, 물리학 실험, 생명과학 실험, 지구과학 실험, 심화국어, 미적분, 확률과 통계, 경제수학, 심화영어독해Ⅰ, 현대 문학 감상, 수학과제탐구, 실용수학, 영어 비평적 읽기와 쓰기, 사회 문제 탐구, 국제정치, 국제경제, 생활과 과학, 중국어 회화Ⅰ, 교육학, 논리학, 심리학, 실용경제, 환경
수도여고 (공립고) 동작구 881명	22	**47**	심화국어, 기하, 영미문학읽기, 음악연주, 미술창작, 스포츠생활, 정치와 법, 사회문제탐구, 세계사, 세계지리, 윤리와 사상, 고전과 윤리, 물리학Ⅰ, 화학Ⅰ, 생명과학Ⅰ, 지구과학Ⅰ, 생활과 과학, 일본어Ⅰ, 중국어Ⅰ,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고전읽기, 미적분, 수학과제탐구, 경제수학, 영어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체육전공실기기초, 스포츠 경기체력, 음악전공실기, 공연실습, 미술전공실기, 평면조형, 사회문화, 경제, 한국지리, 여행지리, 동아시아사, 생활과윤리,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 융합과학, 과학사, 음악감상과 비평, 미술감상과 비평

은광여고, 수도여고가 학생수가 더 적은데도 자사고인 세화여고보다 더 많은 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그만큼 다양한 학생들의 원하는 수요를 수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하는 과목이 없으면 교육과정 거점학교, 공유캠퍼스(학교 간 협력 교육과정)를 활용하여 다른 학교에서 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자사고에서 일반고보다 교육과정의 자율성이 높다고 하는 것은 더는 맞지 않는다.

4. 종교교육의 자율권은 자사고가 아닌 대안교육으로도 가능

대광고 김의석 사건 이후로 대광고를 비롯한 일부 종교계 사립학교는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위해 자사고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기존의 학생 배정방식으로는 학생의 학교 선택이 온전히 보장되지 않아 종교교육을 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교교육의 자율성은 명분에 불과하고 입시 명문고에 대한 욕망을 감추기 어려워 보인다. 종교계 학교로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진정성 있게 교육하는 많은 교육부 인가 대안학교가 있다. 대안학교는 추첨으로 배정받는 국공립학교와는 달리 학생들이 직접 ‘선택’하는 학교다. 학생들은 고교졸업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별도로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그만큼 대학진학에 불리함을 감수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을 믿고 선택한 학생들이 있다. 충남 금산군에 있는 기독교 대안학교인 별무리학교는 ‘성경적 삶의 훈련’과 ‘자기주도학습’에 두각을 나타내며

학생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학교는 요즘 공교육 쪽에서도 관심을 보일 정도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학생의 선택으로 300개가 넘는 과목이 개설되고, 교과 교사가 과목 내용을 재구성하여 공교육에 선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일반고의 학생 배정방식 속에서도 종교계 학교의 설립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더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방식으로 종교적 내용을 재구성하여 많은 아이에게 다가갈 수 있다.

5.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

법원은 사건의 본질을 알고 있는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교육청이 평가한 것이다. 발제자의 주장대로 기존의 평가 기준이 이제는 유효하지 않으니,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당연하다. 평가 기준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얼마나 미리 알려야 한단 말인가? 정상적인 교육 활동을 중심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평가 기준의 공개는 수개월 전이면 충분하다.

법원은 자사고의 입장에만 귀를 기울이며 지엽적인 절차에 집착하는 것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한국 사회 전체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형식적법치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자사고 측에서도 일반고 전환이 큰 피해를 받는 것처럼 호도하지 말고 이제라도 교육의 의미를 회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2토론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에 대한 토론문

이용우(변호사,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서울시공익변호사단)

1. 시작하며

○ 발제자는 고교서열화의 현황,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의 현주소(교육부의 정책 추진 경과, 이해관계자들의 대응), 법원의 최근 일련의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판결의 문제점과 법령 헌법소원에 대한 우려, 후속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언급하면서 현재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 개선지점을 제시했음. 전체적으로 내용에 동의함.

○ 이번 토론회는 일반고 역량강화 측면보다는 고교서열화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전자의 문제 또한 후자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함께 논의하면 문제해결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최근 행정소송 판결에 대한 검토

가. 판결 요지

○ 2020. 12. 18. 부산해운대고, 2021. 2. 18. 배제고와 세화고, 같은 해 3. 23. 숭문고와 신일고에 대한 자사고지정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자사고의 손을 들어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음.

○ 법원은 대체로, 기준 점수를 70점으로 상향한 것, 평가 지표의 신설 및 변경은 자사고가 예측하기 어려움에도 이를 평가대상기간에 소급하여 적용, 평가 방식의 차이(감사 지적 사례 점수 상향, 법인전입금 전출 계획 이행 여부)등은 자사고에게 현저하게 불리하며 미리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었으므로 자사고지정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

○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자사고 재지정제도 자체를 폐지하거나 자사고 운영기준을 현저하게 다른 형태로 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고가 중대하게 변경된 평가기준을 이 사건 평가 대상기간에 소급적용하여 평가를 진행하고 이 사건 학교가 지정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고 평가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재지정제도의 본질 및 공정한 심사요청에 반하”였다거나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 및 적법절차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요청에도 반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나. 판결 비판

○ 자사고의 지정 및 지정 취소는 원칙적으로 교육감 및 교육부 장관의 고유한 정책적 전문적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처분에 있어 재량권은 광범위하게 보장된다는 것이므로 평가의 적정성이 현저하게 일탈한 것이 아니라면 이를 쉽게 취소할 것은 아님

○ 입시위주의 운영을 시정하고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자사고 운영 평가라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인정됨에도 법원은 이와 같은 공익상 필요성을 쉽게 간과하고 기득 이익에만 주목한 것으로 보임

○ 법원은 교육청이 2019년 평가지표를 예측가능성 없이 소급적용하여 사전공표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였다고 하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자사고로서는 변경된 평가지표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평가됨

○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더라도 고교학점제 도입 등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므로 그 제한되는 사익은 크지 않는데 비해 이로 인해 담보될 사학의 책무성과 공교육의 공공성은 제고라는 공익은 매우 크므로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 등을 보더라도 평가 기준, 항목, 지표, 점수 등 평가계획과 방식 등은 반드시 평가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마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평가대상기간 도중에 마련하여 소급 적용하여도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님.

○ 2014년에 비하여 2019년 평가에서 변경된 사항들이 재지정 취소에 결정적이었다고 볼 근거가 명확치 않고, 변경되지 않았다면 재지정되었을 것이라고 볼 근거도 부족함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 처분으로 학교와 구성원 등에게 미칠 영향은 자사고가 제도 취지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을 전제로 평가해야지 입시 명문고로서의 지위를 기준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할 것은 아님

○ 서울시교육청은 부산과 달리 평가 기준점수가 2014년에 비하여 상향되지 않고 그대로 70점을 유지하였으므로 부산해운대고와 다른 사정도 있음

3.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하여

○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위협을 받고 있음. 향후 1, 2심 판결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임.

○ 좀더 근본적으로 헌법재판소의 법령헌법소원의 추이도 주목해야 함.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또는 관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대선 국면에서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방안과 기존 정책의 보완 등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4. 일반고 역량 강화를 위하여

○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의 일반고 전환이라는 고교서열화 해소의 주요 정책이 순조롭게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일반고 역량 강화가 자연스럽게 달성되는 것은 아님.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 실시, 새로운 교육과정 발표 등의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을 추진하

고 있음. 추진 중인 방안의 내용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이와 같은 방안만으로 충분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함.

◯ 이에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 이외에 일반고 역량강화 방안과 관련하여 보완 및 추가되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발제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3토론

고교서열화는 '해소'가 아닌 '불가'여야 한다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

1. 들어가며

특권학교를 만들고 이를 지켜내려 온갖 수단과 인맥을 동원하는 기득권이 연이어 승소했다. 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불복하는 자사고들의 편에서 '그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은 모두가 예견했던 결과였다. 발제문에 정리된 대로 자사고가 생긴 이래 끊임없이 되풀이되어 온 장면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때 '다양성'으로 포장해 양산된 자사고의 탄생을 막지 못했던 결과 10여 년을 싸우고 있는, 말 그대로 소모전이다. 대학서열화는커녕 고교 서열화도 해결하지 못한 채 다람쥐 쳇바퀴 같은 교육사를 반복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차기 정부에 넘겨질 2025년 일괄 폐지 선언도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 10명 중 7명이 반대하는 자사고를, 학교 문을 닫자는 것도 아니고 다른 학생들과 함께 다니는 일반고로 바꾸자는 것조차 그들에겐 용납되지 않는다. 교육을 특권층의 대물림 수단으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절대로 계층 이동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스카이캐슬을 사수하기 위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돈이 되고 표가 되는 정책은 거침없이 밀어붙이면서 교육 제도는 교육청 뒤에 숨어서 흘러가는 모양새를 지켜만 보고 있는 정부의 속내가 의심스럽다.

2. 법조인들의 모교, 특권학교 구하기

2020년 1월 외고 출신 변호사들이 '외고연합변호인단'을 구성해 외고 살리기에 나섰

다. 변호사뿐 아니라 판사들도 외고 출신이다. 법률신문사의 '2013년판 한국법조인대관' 보도에 따르면 전체 법조인 2만 1,717명 가운데 경기고와 대원외고 출신 법조인이 각각 46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대원외고는 2009년부터 4년 사이에 138명의 법조인을 새로 배출했다. 특히, 이 기사에 따르면 현직 판사의 출신 고교 1위~3위가 외고(대원외고 85명, 한영외고 43명, 명덕외고 39명)다. 현직 검사의 출신 고교 순위에서도 대원외고가 44명으로 1위를 기록했다. 22명을 배출한 한영외고는 공동 3위에 올랐다. (출처 : 2020.1.6. 오마이뉴스 / 윤근혁 기자) 검사, 판사까지도 공익이 아닌 모교 살리기가 우선이다. 초·중등교육법이나 시행령 개정 등에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헌법 소원까지 준비하는 이들에게 하위법 개정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사고 상황도 외고와 다르지 않다.

3. 헌법이 보장하는 '능력'

헌법 31조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틀렸다. 능력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혹자는 이 능력이 요즘 화두에 오른 '능력주의'가 아닌 교육이 지향해야 할 보편적 능력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능력'과 '자유'라는 조항이 경제적 능력과 학습받을 자유로 포장되어 수월성 교육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된다면 이제는 과감하게 개정해야 한다. 이 조항이 왜 문제인지 깨닫지 못해서, 이명박 정부 때 자사고의 탄생을 막지 못해서, 우리 자녀들도 학교를 입학하는 순간부터 서열화되고 등급이 매겨지는 기울어진 세상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이다. 부모를 잘못 만나 계층 이동은 꿈도 못 꾸고 부모보다 못한 학벌과 불안정한 미래를 한탄하며,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선거 때마다 욕을 먹는 세대가 되어 버렸다.

4. 교육당국의 소송 대비, 가능할까?

해운대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의 2심, 3심과 기타 학교들의 1심에 대비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하지만, 교육당국이 어떤 대비를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승산이 있을지는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 모교가 아닌 공익의 편에 서는 법조인의 양심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눈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모를까...
그동안의 행보로 판단하면 현 정부가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은 너무 소극적이다. 내로남불, 각자도생으로 표현되는 정부가 보여준 교육 방향은 비싼 학비를 낼 수 있는 부모를 만나, 남들과 다른 특별한 교육을 받고, 학연과 인맥이 보장된 스카이를 졸업

해, 특권을 대물림하는 것을 '공정' 프레임으로 포장한 것뿐이었다.

5. 판을 뒤엎는 시민력이 필요하다

올해 2월 행정법원 앞에서 만세를 부르는 자사고를 보면서 이를 악물고 이렇게 말했다. "오늘 우리는 2년 전에 끝난 경기에 불려와서 또 다시 출발점에 세워졌습니다. 심판과 한 편인 선수와 싸운다는 게 바로 이런 기분일 겁니다. 달리기 경기에 참가해 놓고, 규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대충 걸었으니 경기 자체가 무효라고 우기는 격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그 선수,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려는 기득권의 결속이 얼마나 견고한지, 우리가 깨뜨려야 되는 벽이 얼마나 높고 두꺼운지 오늘 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발제문에서는 시민사회의 적극적 대처를 당부했지만, 시민사회는 특권학교가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싸워왔다. 자사고의 탄생을 저지하기 위해 교육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종교, 여성, 농민, 노동자 단체들이 함께했었고, 자사고와 외고의 비리 감사를 청구했으며, 단식과 릴레이 1인 시위를 매년 한 달 이상씩 되풀이했었다.
2009년 자율형사립고 대응 공동행동, 2011년 행복세상을 여는 교육연대, 2012년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2017년 특권학교 폐지 촛불시민행동 등 수십 개 단체들이 연대체를 구성해 앞장섰었다. **그리고 번번이 제자리로 되돌려졌다.**
시민사회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그들은 더 상위법으로 대응했고 헌법까지 들먹였다. 이제는 다른 전략이 필요하다. 벽을 깨려 애쓰지 않고 벽을 무시하고 다른 길로 나가야 한다. '능력'을 앞세운 헌법 31조 1항(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과 교육기본법 3조 1항(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을 개정해야 한다. 판 자체를 뒤엎어야 한다.

6. 역사를 바꾼 것은 정부가 아닌 민초의 힘

정부에 기대하거나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지금부터 방향을 다시 잡아 시작하자. 매번 뒷북을 치며 지는 싸움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헌법 개정 운동을 제안한다. 헌법 소원을 준비하는 저들보다 한발 앞선 개혁을 준비하자. 역사 속에 부끄러운 86세대로 기록되지 않을 마지막 기회다. 특권 대물림을 끊어낼 수 있는 건 특권층이 아닌 민초들이다. 계층 이동이 아닌 계층 자체를 없애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줄 세우기, 등급 매기기'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금지 행위로 지탄받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

종합토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일시	주제	▣ 사회 ■발제 □논찬 (가나다순)
4.20.(화) 오후 3시	고교서열화 해소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향후과제를 제시한다	▣ 김태훈(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부위원장)
		■ 구본창(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국장)
		□ 김진훈(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 서울 숭의여고 교사)
		□ 이용우(변호사, 민변 교육청소년위, 서울시공익변호사단)
		□ 이윤경(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